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67
----------	-----

제출년월일 : 2005. .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난업무를 전담하는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을 조례에 반영시키고,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2조 정원의 총수를 969명에서 976명으로 7명 증원
 - ▶ 집행기관의 정원 : 952명을 959명으로 7명 증
 -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변동없음)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별표]에 신설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 15조 및 제21조

4. 의안전문 : 따로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첨 부 : 참고자료 1부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969명”을 “976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952명”을 “959명”으로 한다.

제3조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와 같이 하며,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정원의 총수) 제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969명</u> 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952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17명</u>	제2조(정원의 총수) <u>976명</u> 1. <u>959명</u> 2. (현행과 같음)
제3조(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전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u>규칙으로 정한다</u> . (신 설)	제3조(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u>[별표]와 같이 하며,</u> <u>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u> <u>[별 표]</u> <u>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정원표</u> “표” 별지와 같음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750		145	18	22	120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734	335	11	88	70	20	106	104
4급	5	3	2	1				
5급	45	17	2	4	5	1	7	9
6급	180	101	3	16	21	4	26	9
7급	229	97	4	29	23	7	32	37
8급	181	74	1	30	17	5	21	33
9급	94	43		8	4	3	20	16
별정직 계	16	1		13	2			
6급상당	1	1						
6-7급상당	11			11				
7급상당	3			1	2			
7-8상당								
8급상당	1			1				
연구직 계	2	1			1			
연구사	2	1			1			
지도직 계	32			32				
지도관	3			3				
지도사	29			29				
기능직 계	191	82	6	8	70	2	14	9
6급	6	2		1	3			
7급	17	8			9			
8급	28	10			18			
9급	63	27	5	5	22	1	2	1
10급	77	35	1	2	18	1	12	8

도내 자치단체별 정원현황

<2005.02.01 현재>

시·군	표준정원	보정정원	현정원 (보정정원대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공무원
청주시	1,584	1,663	1,663 (-)	1,307	337	19
충주시	1,235	1,272	1,261 (△11)	997	244	20
제천시	948	976	969 (△7)	761	191	17
청원군	682	716	759 (+43)	595	136	28
보은군	549	576	585 (+ 9)	481	85	14
옥천군	526	552	592 (+40)	475	94	23
영동군	560	588	606 (+18)	502	86	18
증평군	280	294	303 (+ 9)	240	50	13
진천군	465	488	500 (+12)	403	86	11
괴산군	573	601	607 (+ 6)	492	96	19
음성군	540	567	591 (+24)	477	96	18
단양군	493	517	539 (+22)	414	110	15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 제13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정원은 정원의 관이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5.16, 1999.9.9, 2000.12.30>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등을 참작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계급내에서 행정직 및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별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복수의 직별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해당분야의 직별이 없어 일반직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험·연구·조사·교육·상담(사회복지분야의 상담업무를 제외한다) 등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관이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5.16 2000.12.3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회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회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및 그 출장소
- 제14조 (표준정원의 책정) ①지방자치단체는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이하 "표준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2.4, 1998.8.31>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원책정의 적정여부를 그 검토결과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4, 1998.8.31>
-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또는 9월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7.2.4, 1998.8.31>
- ④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경계변경 또는 종류의 변경으로 표준정원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인구·면적 기타 행정수요가 유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에 의할 수 있다. <신설 1998.8.31>
-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조정으로 인하여 정원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을 조정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 ⑥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은 표준정원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8.31>
- 제14조의2 (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중기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③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8.31>
-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18>
- ⑥제4항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8.8.31>
- ⑦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8.31>
- [본조신설 1997.2.4]
- 제15조 (정원의 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8.31>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

숙련함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8.3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와 같다. <개정 1995.5.16>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기타 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8.8.31>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이기관 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1995.5.16, 1998.8.31>

⑥삭제 <1998.8.31>

⑦삭제 <1998.8.31>

제16조 (별정직 정원) ①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열거한 경우에 한하여 책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내 그쳐야 한다. <개정 1997.2.4, 1998.8.3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상당계급을 상한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원책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4, 1998.8.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사유 및 임용자격기준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7.2.4>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별정직 외의 정원으로 변경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별정직 정원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른 종류의 정원으로 변경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12.30>

제17조 (우대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일반직 9급지방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8급 및 9급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9급지방공무원을 8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8급지방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9급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6.11.18]

제18조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일반직지방공무원의 7급·8급·9급
2. 기능직지방공무원의 7등급·8등급·9등급·10등급
3. 소방공무원의 지방소방장·지방소방교·지방소방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6.11.18]

제19조 (한시정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한기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개정 1998.8.31, 2001.12.19>

②한시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개정 2001.12.19>

④삭제 <1998.8.31>

⑤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 조정할 수 없다. <신설 1997.2.4>

⑥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

로 정한다. <신설 1997.2.4, 2001.12.19>

⑦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2.19>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1.12.19>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신설 2001.12.19>

■ 제20조 (직급별 정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8.3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정원감축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정원에 대하여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원책정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5.16, 1995.12.28, 1998.8.31>

1. 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 : 정무직지방공무원, 일반직 4급이상·연구관·지도관 지방공무원, 소방정 이상 지방공무원, 기능직 4등급이상 지방공무원, 별정직 4급상당이상 지방공무원의 정원

2. 광역시·도·시·군·자치구 : 정무직지방공무원, 일반직 5급이상·연구관·지도관 지방공무원, 소방정 이상 지방공무원, 기능직 5등급이상 지방공무원, 별정직 5급상당이상 지방공무원의 정원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 각호의 정원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직렬의 공무원정원을 다른 직렬의 공무원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직위의 직무를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8, 1998.8.31, 2004.12.18>

■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5.16, 1998.8.31, 2000.12.30>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12.18>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18>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급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신설 1997.2.4>

⑤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2.4>

■ 제21조의2 (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①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실·국장 및 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위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위에 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 불구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6.30]

■ 제21조의3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따른 한시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폐지한 시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와 한시지구에는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8년의 범위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견이라도 한시기구 또는 한시정원의 감축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시기구 또는 한시정원을 감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19]

제6장 보칙

■ 제22조 (시정요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영 및 이 영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기구 또는 정원을 책정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